

‘반값 등록금’ 문제 해결은 국공립대학의 과감한 구조조정으로...

올해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군 공통 단어를 꼽는다면 ‘무상급식’과 ‘반값 등록금’이다. 무상급식은 지난해 지방 선거에서 시작되어 결국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시장직을 중도 포기하는 사태를 만들었다. 반면에 새롭게 이슈화된 ‘반값 등록금’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당선시키는데 효자 단어로 사용되었다. 결국 정치권에서 유발된 이 두 단어는 정치권의 판도를 바꾸어 놓는 귀중한 기폭제가 되었다.

서울시장 선거가 끝나자 정치권에서의 논란은 꼬리를 내리는 듯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이를 행동으로 보이고 있다. 서울시립대학의 등록금을 반으로 뚝 잘라 인심(?)을 베푸는 일을 단행한 것이다. 그러나 반값 등록금 논쟁은 보편적 복지나 선택적 복지냐를 떠나 아직도 꺼지지 않은 불꽃이며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교육은 국가경쟁력의 원동력이며, 세계 사회에서 볼 때 선진국형 사회 시스템의 구축에 필수이므로 교육은 투자인 동시에 복지차원의 문제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경제 성장 근간된 높은 교육열 · 고등교육 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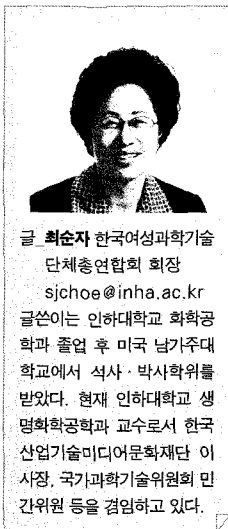
2011 OECD 교육지표에 의하면 지난 50년간 교육 팽창은 OECD 국가에서 근본적 사회 변천을 가져오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1961년 고등교육은 극소수의 특권이었기에, 많은 나라에서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은 고등교육을 받기 어려웠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을 받고 있으며, 3명 중 1명은 대학교육까지 받고 있다. 고등교육(대학교)의 이수율과 관련하여 OECD 국가들은 3개로 분류된다. 미국이나 캐나다, 뉴질랜드처럼 역사적으로 고등교육 이수율이 높은 나라, 독일, 일본, 스위스와 같이 중간인 나라, 그리고 한국이나 멕시코, 스페인처럼 이수율이 낮은 나라들로 분류된다. 이들 중, 대한민국은 지난 50

년간 4년제 대학진학률이 10% 이내에서 71%로 올라가 세계에서 대학진학 상승률이 가장 높은 나라로 발표되었다. 그러나 한국 대학의 공교육비는 OECD 평균보다 적은 면이 있지만 사교육비는 칠레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나라로 평가된다. 지금까지 한국이 국민의 높은 교육열과 고등교육 이수율로 국가 발전과 경제적 성장을 이뤘다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없겠지만, 오늘의 비싼 등록금 문제는 우리나라 미래를 위하여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국가 발전에 기여한 교육 역사는 정부가 수립된 1948년 이후 약 63년이 되었다. 그동안 우리 국민의 교육열은 정부의 정책 노력에 더해져서 오늘에 이르렀다. 특히 의무교육의 역사를 보면 1954년 정부는 ‘의무교육완성 6개년 계획’을 세워 취학률을 높였으며, 교육재정 보충을 위해 1958년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공포하고, 과밀학급, 2·3부제 수업 등을 해소하면서 1990년에 초등학교의 의무교육을 완성하였다. 중학교 의무교육은 1984년 교육법에 “모든 국민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법적인 기초를 마련했다. 해를 거듭할수록 의무교육의 내용이나 대상 학년, 그리고 지역으로 확대하면서 2002년에 전국적인 중학교 의무교육이 실시되었다. 결국 초등학교의 의무교육은 36년, 중학교는 18년이 걸려 완성되었다. 그러나 아직 고등학교의 의무교육 제안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현실로 비추어볼 때, 대학의 반값등록금 문제는 또 다른 커다란 이슈가 아닐 수 없다.

진정성 없는 정부의 반값 등록금 해결책

2011년 우리나라 대학의 등록금 관련 실상을 보면 등록금을 내야하는 학생이나 그 가족 입장



글 **최순자**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sjchoe@inha.ac.kr
글쓴이는 인하대학교 화학공학과 졸업 후 미국 남가주대학교에서 석사·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인하대학교 생명화학공학과 교수로서 한국 산업기술미디어문화재단 이사장,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민간위원 등을 겸임하고 있다.

에서 볼 때 현실은 암담하기만 하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대학생은 194만3천437명(여학생: 72만7천178명)이고, 대학원생은 총 30만1천411(석사 25만2천10명, 박사 4만9천401명)이므로 전체 대학 및 대학원생수는 총 224만4천848명이다. 4년제 대학의 대학진학률은 71%, 2년제 대학의 진학률은 36%로 4년제와 2년제 이상의 대학진학률은 총 82%에 이른다. 이는 1995년도의 40%(4년제 대학)와 27%(2년제 대학)에 비하여 2배정도 증가된 수치이다. 현재 4년제 대학수는 202개이며, 2년제 대학을 포함하면 총 347개에 이른다.

이와 같이 많은 대학들의 등록금 또한 다양하다. 2011년 OECD 통계에 의하면 4년제 국공립의 경우, 1년 등록금은 5천315달러이고 사립은 1만109달러이다. 즉 사립대학의 등록금이 국공립의 2배에 달한다. 미국의 경우, 주립대학과 사립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각각 6천312달러와 2만2천852달러이다. 그 밖에도 일본은 4천602달러, 호주 4천140달러, 캐나다 3천774달러, 스위스는 879달러, 프랑스는 1천309달러이다. 핀란드와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체코는 국공립대 등록금이 면제이고, 1인당 GDP가 우리나라 절반 수준인 멕시코의 국공립대는 등록금이 없다. 특히 한국의 대학등록금에 대한 정부와 민간 부담은 각각 0.6과 1.9인데, 이는 OECD 평균(1.0)의 두 배에 다다른다. OECD 공교육비 통계는 국공립만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우리나라의 고등교육단계 공교육비 정부부담률과 민간부담률 지표는 사립대가 포함되면 훨씬 더 나빠지게 된다.

반값 등록금에 대한 정부와 집권여당은 '등록금 부담 완화 및 대학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였다. 첫째, 학비 지원 사업은 대학 등록금 납부 고지서상 실제 인하되도록 지원, 등록금 동결 전제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아닌 일반회계에서 지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정부가 각각 1조5천억 원, 2조3천억 원 및 3조 원을 지원하고 대학은 자구노력으로 매년 5천억 원씩 지원하여 등록금을 15~24%의 인하효과를 제시하였다. 둘째, 저소득층을 위한 국가장학제도 정비·확충으로는 없어졌던 차상위 계층 장학금 2천억 원을 복구하여 2014년까지 전체 학생의 10%까지 국가장학금 지급 방안 및 2012년 하반기부터 군입대 기간 이자 면제 등을 제시하였다. 셋째, 대학 재정운용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정보공시를 확대하고 지도·감독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넷째, 대학 구조조정 방안으로는 부실대학 퇴출 방안을 마련하는데 사립대학구조개선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

그리고 국립대 재정회계법 입법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은 정치권에서 표를 의식한 방법으로 국민의 가슴에 와 닿는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

교육은 투자인 동시에 복지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시장에 근거를 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그러므로 국가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시장 경제를 뒤흔드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그러기에 현 시점에서 국가가 할 수 있는 대안 중 단기와 중장기 계획 중 대표적 한 가지씩을 제안한다.

첫째, 국공립대학의 획기적 구조조정이다. 즉 부실한 국공립대학을 정리하고 정원을 대폭 줄이며, 최소한의 등록금과 획기적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지역대학의 발전과 동시에 지역의 우수 학생들이 그 지역의 국공립대학에 입학하는 유인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지역이 배출한 우수인재를 그 지역의 산업에 유치하여 우리 사회의 병폐인 인재의 수도권 집중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서울소재 47개 대학(전문대학 포함) 재학생 40만 명 중에서 85% 이상이 지방 출신이므로 숙식 등 교육을 위한 초과비용을 막을 수 있다. 또한 지역의 국공립대 발전은 그 주변은 물론 서울 소재의 사립대학에도 영향을 주어 각 사립대학이 등록금 인하와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획기적인 자정 계획이 나올 것이다.

둘째, 고등학교에 대한 의무교육을 포함한 교육에 대한 국가의 장기 인력 수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교육은 국가경쟁력의 원동력이므로 투자인 동시에 국민 복지이다. 또한 교육은 선진국형 사회시스템 구축에 필수요건이다. 선진국과 G20 국가 대부분이 국가경쟁력이 높아질수록 고등교육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교육은 백년대계가 필요한 과제이다.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그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임기응변식이나 국민의 표를 의식한 성숙하지 못한 정책으로 대처한다면 언젠가 우리 모두 그 비용을 지불하는 시대를 맞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단계적으로 효율적인 비용을 투입하여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빠르게 사회에 정착될 수 있는 정책 채택이 중요하다. ④